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지방 발전 및 기후·에너지 관련 논의

- 산업정책, 인구유입을 고려한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필요성 논의
- 탄소 감축 뿐만 아니라, 우리 경제·사회 적응 정책 강화 필요성 논의

-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6.4.(목) 「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*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- * (미래사회전략반, 6명)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(분과장),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, 김기선 충남대 법전문 교수,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,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,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

- 금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, 기후·에너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-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으로는 전략적 거점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가 중요하며, 지방으로의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.
- 기후·에너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탈탄소 필요성,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, 온실가스 감축 등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.

- 권오현 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지방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·제도적 인센티브가 함께 고려된, 산업정책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.
 -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에 따라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상이하므로 은퇴 계층,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
 -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·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,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 -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중요하므로, 자녀의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 하였다.
 - 기후·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탄소 감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우리 경제·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	책임자	과 장	이혜림 (044-214-1710)
		담당자	사무관	심지혜 (jihyesim@korea.kr)